

이달의 초점(특별좌담)

2007년 보건복지정책방향과 중점연구방향



주 제 : 2007년 보건복지정책방향과 중점연구방향

일 시 : 2006년 12월 26일(월) 14:00~17:00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

사 회 : 고경환 보건복지포럼 편집간사

참석자 :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

이상영 보건의료연구본부장

김미곤 사회보장연구본부장

김승권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

송태민 지식격영정보본부장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연구본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2007년은 참여정부의 국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인 동시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중요한 한해라 생각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양극화, 사회서비스의 확충문제, 자유무역협정(FTA)과 개방화 등과 관련된 많은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기능과 책임의 중요성을 새삼 통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2007년도 중점 연구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해 최병호 박사님부터 토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역사 이래 저출산사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양극화 문제가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와 경기둔화의 원인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어 하나의 합일화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영 | FTA 체결의 확산에 따른 개방화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FTA에 이어서 FTA 협상 대상국은 EU, 중국, 캐나다, 일본, 아세안 국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과 급격한 개방으로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의 상당부분이 몰락하여 오히려 한국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전망은?

최병호 | 예, 참여정부의 집권기간을 특징짓는 중요한 사회정책적 현상은 저출산사회의 위기 인식과 사회양극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 출산율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개방화로 경쟁력있는 산업이 생존하고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시장에서 승자가 됨으로써

사회 각 계층간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최소한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김미곤 |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양극화라는 양 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사회안전망과 성장잠재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인 반면에, 소득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배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 하의 세계화에 따른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무한경쟁은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국내의 계층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중하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급증하고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양극화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김승권 |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경제의 어려움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많은 가족이 기능약화, 해체 등으로 치닫고 있음도 복지환경 변화의 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빈곤여성, 빈곤아동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재정으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공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비영리기구, 기업, 시장 등 다양한 복지공급자를 필요로 하는 복지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에 국가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남훈 | 출산율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결혼과 출산을 급격히 억제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생산인구층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미래에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빠른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저해를 가속화시키고 생산인구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상인 반면에 저출산은 정책적 노력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정책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태민 | 우리정부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가기간전산망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광대역통합망구축, IT839전략 등을 통하여 Cyber Korea, e-Korea, Broadband IT Korea를 거쳐 현재의 u-Korea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신뢰성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의 제공과 산업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양질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복지를 포함한 사회통계가 취약하여 정책의 수립이나 성

과 등을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통계를 개선하고 신규통계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복지예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예산의 투자 방향과 확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병호 | 네, 사회예산의 증가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조세부담을 늘리거나 국가채무를 늘리는 등의 재정정책상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재정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사회지출은 사회적 보호



▲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

를 위한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인 데에 기여하는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입니다. 사회지출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투자가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투자의 우선순위와 투자방법을 재설계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우리 사회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고래해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를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정책,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그리고 정보 통계분야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부문부터 논의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우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주도하는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는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진료비의 증가 속도와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계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국가적 재정 지원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의 확대입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편익에 추가해서 인적 자본의 증진과 경제성장 등에 막대한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들은?

이상영 |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사회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의료비를 포함한 국민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

WHO에 서 도 Commission on Macroeconomics를 조직하여 보건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출생시 기대여명의 10% 향상은 연간 0.3~0.4%의 경제성장을 유도 해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들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각각 77년과 49년 임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연간 1.6%에 해당됩니다.

조남훈 | 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하되 개인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물을 마셔야 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지식(health literacy) 증대와 건강관리에 대한 실천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육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상영 | 두 번째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시장 개방을 단순히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변화로만 인식하는 수동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개방의 물결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방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편익은 극대화되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남훈 |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미 FTA의 의약품부문 협상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문연구자가 협상대표로 활약하기도

하였으며, 협상전략 수립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생산·발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질서 하에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의약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상호 자격인정(mutual recognition) 등과 관련하여서도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병호 | 이와 함께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08년까지 New York Presbyterian 병원이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인 시장개방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영 | 세 번째로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병상수나 의료기관수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간이 운영하는 비율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료를 약 30% 수준

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단순한 수치로서의 목표를 떠나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강보장과 국가 전염병 관리 강화 등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공공의료의 확충은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서비스 확대방안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호 |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의 유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자원의 중복투자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 이상영 보건의료연구본부장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염병 예방 집중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영 | 공공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증대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양적 투자확대 보다는 효율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구고령화나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병상 확충, 방문간호사업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편과 생애 초기 건강투자도 필요합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장려와 함께 영유아기에 건강한 출발을 위한 건강투자전략도 국가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최병호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약제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진료비 중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29%에 달하고 있어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영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산업 부문은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은 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병인서비스 등 서비스의 확충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4대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부문의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 | 네, 그동안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하고, 4대 사회보험간의 연계와 운영상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체계 구축 및 소득과약 사각지대 해소 등을 바탕으로 부과·징수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 특히, 공공건설현장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최병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등 빈곤층 복지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혜택이 미미치 못하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을 개선하여 기초보장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기초보장을 해주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대상별 및 욕구별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해소 및 예방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김승권 | 그렇습니다.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자활사업의 성공률 제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분명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저소득층의 국민이 얼마나 중산층화되었는지, 즉 정책적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지고 저소득층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건강성을 보장하는데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미곤 |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범위가 놓여진 곳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되는 등 노

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납부 예외율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 확대를 통한 비정규·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경로연금·국민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같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영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장률(2005년 현재 6.5%)이 미흡하고, 부양책임의 사회적 공유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이



▲ 김미곤 사회보장연구본부장

용 가능한 치매병원, 요양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에 관한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 수탁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곤 |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독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이 의료급여제도 수급자 관리 사업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기초보장 수급자의 과잉·부정급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듯이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과악 시스템도 취약합니다. 제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정·과잉 급여를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이제 주제를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회투자, 장애인 취업,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 사회정책부문의 주요

현안과제들로 돌려 논의하겠습니다.

김승권 | 다른 국가정책이 그러하듯이 사회복지정책도 성과관리를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최소비용에 의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평가기관을 설립·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평가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과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의 수정·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향후 사회복지지는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의 영역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금까지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지방분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지역사회복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더 나아가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분담방식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병호 | 보편적 서비스 관점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빈곤아동, 10대 자살, 아동방임, 10대 미혼모 임신 등으로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이 저하되고 실업에 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회투자로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책과 모든 아동에 대한 권리증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은 취업이 매우 어려운 만큼 취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서비스 및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구 선진복지국가가 경험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이를 전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고 사회 및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승권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의 인프라 구축실태는 서비스분야와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기능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중복기능을 하는

인프라가 많고, 전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서비스 영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이 발생되어 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누락되어 소외계층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서비스가 당초 계획된 대상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요구됩니다.

사회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5~2010)이 지난 2006년 8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관리체계상의 현안과제는 무엇인지요?

조남훈 |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시행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관리운영체계는 아직도 구축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중앙단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범 정부적 추진체계

를 갖추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중앙의 15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230여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광범위한 내용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동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가 없이는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병호 | 동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경제, 문화, 인구학적 제반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인 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각급 사업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시달된 기본계획을 지역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업기획과 평가에 관한 기술교육에 역점을 둔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부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교육과정을 포함 시켜도 강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

종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진 양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영 |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진도와 현지도도를 위한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가 미약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시도 단위에 가칭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연석회의를 통하여 사업운영 개선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이고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심어주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남훈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대책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결혼 및 출산 문화가 상이한 OECD국가의 사례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연구와 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방안, 아동수당제도,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제도, 역모기지제도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지식경영정보 부문의 현안과제에 대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민 |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의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년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중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는 5,110개로 이중 상업사이트는 2004년 3,746개(72.3%)에서 2005년 2,968개(58.1%)개로 감소한 반면, 개인사이트는 1,026개(20.1%)로 323(5.6%)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리하기 쉬운 개인사이트가 증가한 반면, 상



▲ 고경환 보건복지포럼 편집장사

업사이트는 웹 사이트의 관리와 운영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및 폐쇄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이트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건강정보제공(28.6%), 온라인 건강상담(23.5%), 그리고 진료예약(15.4%) 등이 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상업기관 사이트는 단순 건강정보보다 질병정보의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영 |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공은 질병 악화, 유병기간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사이트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송태민 | 산업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발전은 양질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으며 복지정보에 대한 수요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 추구하는 복지정보 및 복지분야의 전자정부서비스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

고 봅니다. 즉, 전자정부서비스의 역할 수행, 양질의 복지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복지정보 단일창구로서의 복지정보포털시스템, 복지시설들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질향상 등의 측면에서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향후 관리운영에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권 |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정보를 어떻게 접목하느냐는 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방지,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의 정보화, 유용한 정보의 공유 등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영유아,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최첨단 IT기술의 도입으로 보다 발전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IT국가인 한국사회에서는 충분히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영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통계생산과 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보건복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범국가적인 통계수집체계와 전담조직이 미흡하여 보건복지통계의 부족함은

여전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보건통계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4년 제공한 항목은 436개로 요청항목의 62.7%로 이는 전회원국의 평균수준인 76.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할 때 2007년 우리 연구원의 중점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부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 | 한편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이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자료가 일부 가용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금년부터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가능한 한 장기간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 우리 연구원의 중점연구 방향은?

이상영 | 보건의료 부문의 2007년도 연구사업 목표와 방향은 한 마디로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건강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로는 한·미 FTA 이후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설정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체결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그 이후의 의약품관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의 연구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영 | 만성질환은 일본에서는 “생활습관병”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개인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은 과거 오랫동안의 생애주기에 걸친 생활습관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건강관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건강관리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식생활이나 영양섭취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양정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나 비전, 추진전략 등이 별

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면적인 영양정책이 아니라 고령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의 증가라는 환경변화를 커다란 축으로 하여 여기에 부합하는 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또 하나의 연구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송태민 | 아울러 지금까지의 건강증진사업이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근거에 기초한 사업기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거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연구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자 | 건강증진사업은 이제까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습관사업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성장 동력의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부문에 대해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곤 |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와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에서 뒤떨어진 집단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취약집단을 보호하고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혁신을 돕는 물적 토대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여 정치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하여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형평성·효과성·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며, 인적자본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안전망의 보장(Protection) 기능과 활성화(Activation) 기능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장성이 없는 활성화 정책은 근로빈곤층을 양산할 위험성이 크고, 활성화 없는 보장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건강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남훈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정책연구기관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특징을 살리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보건복지 등 제반 제도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미곤 | 정부 출연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기본연구, 정책연구 등의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상위·빈곤패널, 빈곤통계 연보 생산 등입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사회정책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권 | 사회정책부문의 연구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증대하고, 복지정책에서 비교적 열세에



▲ 김승권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있었던 아동복지를 주요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적 지원체계 및 서비스 구축 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즉, 2006년의 중앙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에 이어 2007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지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권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빈곤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장애인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와 세부사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병호 | 또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여성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개발하여 다양한 욕구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김승권 |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인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는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 등으로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가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돌봄서비스의 정책적 제공은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만 향후 연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는 기초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자의 질 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욕구충족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2006년에 실시된 '여성폭력관련시설의 평가지표 개발'과 연계하여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사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다 발전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여성폭력, 노인학대,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등 한국사회에서 대상에 따라 분절화되어 있는 정책적 대응체계를 통합하는 효율적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훈 |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의 중심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에 역점을 두었다면 사업초기인 2007년에는 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 중 아직까지 세부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했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면 금년도 연구센터의 연구방향은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출산 및 고

송태민 | 지식경영정보 부문의 2007년도 연구사업 방향은 국민들의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기반하에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보건·복지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사회자 |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야별 연구방향과 연계하여 2007년도에 어떤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먼저 보건의료부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 추진할 연구과제는?

령사회의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조사연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제동향분석 및 정책개발, 중장기 장사문화 국가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끝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정보교류의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상영 | 보건의료부문에서 2007년에 추진하



▲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

사회자 | 다음으로 지식경영정보 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자 하는 기초연구과제는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적정성과 정책과제,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 전략의 모색 등입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연구과제의 선정은 수차례 걸친 원·내외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마는 연구과제 선정의 우선순위와 기대효과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연구과제별로 기대하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 우선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에서는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적정성과 정책과제 연구에서는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방안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방안과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한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건강투자의 근거와 조건 분석,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별 건강투자의 영역 분류 등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건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 전략 모색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영양문제와 영양서비스 수요를 만성질환예방과 노령화에 따른 영양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하고, 향후 국가영양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의료 이용 및 의료비 패널 구축 사업은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과 자원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이나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사회보장부문에는 어떤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곤 | 우선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 양극

화관련 연구를 경제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빈곤층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교육 불평등에 연구, 2007년 최저생계비 연구, 2007년 빈곤통계연보 생산, 한국복지패널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빈곤정책의 동향 및 기초보장제도 비교분석 등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개선 관련연구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전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 관련 연구,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선, 의료보장체계간 역할분담 방안, 의료급여 공급체계 개선방안,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연금관련해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거대 국민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조직 개편방안 등의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셋째, 기초보장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수급자, 중도탈락자, 신청탈락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 및 동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횡단면, 종단면, 질적 조사에 기초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체계적·심

층적으로 분석예정이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급여의 재정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원의 기본입장에 관한 연구로서, 다양한 복지체제 유형 국가의 제도 비교를 통한 공공부조제도 발전방안 연구, 사회보장제도별 개선방안 및 중장기 사회보장 방향설정 등의 연구들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자 | 사회정책부문에는 어떤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김승권 | 사회정책부문의 추진과제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계획수립,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활성화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평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 평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

합평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재가복지사업의 고객지향적 평가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실질적인 연구일 것입니다. 물론 원내·외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복지관련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하여 장애인복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부문에는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 및 사업 확대 방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도입 방안, 빈곤아동의 현황 및 정책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부문으로는 아동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저소득 장애인 선

정기준 연구, 지방분권화시대에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역할 강화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 우리 연구원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가 설치된지 7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초기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많은 정책연구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까. 금년에는 어떤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조남훈 |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16개 광역 및 246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조직, 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관리 등에 관한 종합실태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성공여부는 중앙단위의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이 시달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능력 여하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결혼 및 출산 친화적 가족문화와 기업문화 조성방안 연구를 추진계획입니다.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여성의 결혼과 출산, 취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사연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연구과제로는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연구와 인구패널조사 기반구축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소위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예정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국제동향분석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내용은 대부분이 OECD 저출산 선진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비교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결혼 및 출산문화가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 중 저출산 국가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과의 국제비교연구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장사문화 국가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실버산업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정책 및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자 | 지식경영정보부문에서는 보건복지통계 생산과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떤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송태민 | 네, 연구원의 다양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통계센터(가칭)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등 사회통계에 대해 기



▲ 송태민 지식경영정보본부장

존통계를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가하면, 조사항목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수요를 고려하여 신설통계를 발굴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기초연구과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e-Welfare에 대한 개념, 유형과 범위,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보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한 향후 사회복지정보화와 e-Welfare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나 부문별 현 위치를 단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삶의 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로 보다 나은 삶의 질 수준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신뢰할만하고 유용한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된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보건복지 분야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수요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통감하게 합니다. 정해년 새해에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 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